

## 우리나라의 공공외교: 평가와 발전 방향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의 공공외교는 짧은 시간 내에 국가이미지를 개선하고, 공공외교의 추진체계 및 방식을 정립하는 등 긍정적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공공외교 수행에 유용한 자원이었던 한류의 인기가 계속될지 장담할 수 없고, 일본 등 주요국에서 혐한·반한 정서가 심화될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으며, 주변국 및 북한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 공공외교, 주한 외국인 및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내적 공공외교와 사이버공간에서의 공공외교 또한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는 등 도전과 과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공공외교의 초기에는 “매력” 등 국가이미지 개선에 주력하였지만, 공공외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이익의 증진이지 이미지 개선 그 자체는 아니다. 따라서 공공외교의 포커스를 상대적으로 단순한 국가이미지 개선에서부터 자국민 보호 등 실질적인 이익 증진으로 재조정하고, 공공외교가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같은 주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공외교와 정무외교, 공공외교와 경제외교 간 시너지를 증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 세미나(2016.3.24) 발표자료

## 목 차

1. 평가: 양호한 출발
2. 현황: “국민과 함께 하는 공공외교, 세계가 신뢰하는 매력한국 건설”
  - 가. 추진 방식 및 사업
  - 나. 추진 목표
3. 도전요인과 과제
  - 가. 도전요인
  - 나. 늘어나는 과제
4. 제안사항
  - 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차례
  - 나. 적극적 정책 조합(policy mix)을 통해 시너지를 살려야
  - 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용자 중심으로 시각 전환이 필요
  - 라. 장기 지속성 공공외교와 단기현안 대처형 공공외교의 동시 필요성
  - 마. 정책을 넘어 마음가짐으로
  - 바. 외교의 목표와 행동의 중요성

## 1. 평가: 양호한 출발

- 문화외교는 예전부터 존재하였지만 공공외교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현상. 2010년이 ‘공공외교의 원년’으로 선포되었고, 2011년에 최초로 공공외교 대사가 임명되었으며, 2012년에는 공공외교정책과가 신설되고 관련 시범사업이 추진되었음
  - 2010년 이후 공공외교는 단순히 문화외교의 ‘재포장’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위상이 제고되었고 가용자원도 증가(2013년 공공외교 신규 예산 60억 원, 2014년 공공외교 예산 90억 원)
    - \* 공공외교의 준거 사례(reference case)로 자주 언급되는 미국의 경우도 냉전 종식을 이유로 1999년 해외공보처(U.S. Information Agency)를 폐지하였다가 9.11 테러를 계기로 공공외교를 본격화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공공외교가 아주 늦다고 볼 수는 없음
- 특히 2016년 2월 『공공외교법』의 제정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외교 전략의 수립과 정책의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 공공외교의 급과 격이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
  - 2016년 8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외교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공공외교 전략과 정책을 수립 및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이러한 노력의 결과 동아시아연구원이 BBC 월드서비스, 글로브 스캔과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긍정적 평가는 공공외교 원년인 2010년부터 지난 5년 사이에 33%에서 38%로 증가. 일반적으로 인식 변화가 더디다는 점을 고려하면 5년 사이에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5% 향상된 것은 매우 고무적 현상
  - 특히 북미와 아프리카에서 한국의 이미지 개선이 뚜렷하게 드러났고, 유일하게 중남미에서만 긍정적 평가가 41%에서 27%로 급락
    - \* 단, 이러한 인식 변화에 있어서 공공외교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 2. 현황: “국민과 함께 하는 공공외교, 세계가 신뢰하는 매력한국 건설”

- 외교부는 현재 “국민과 함께 하는 공공외교, 세계가 신뢰하는 매력한국 건설”이라는 기치 아래, 우리의 공공외교 자산을 활용하여, 외국 대중

에게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 그들의 신뢰와 호감을 얻고,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높여 국제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함. 이를 위해 178개 재외공관을 공공외교의 전초기지로 삼아 현지의 관습·문화·외교관계 등을 고려하는 ‘맞춤형’ 공공외교와 더불어 우리 문화의 일방향적 전파가 아니라 문화의 상호교류를 통한 ‘쌍방향’ 공공외교를 추진 중

## 가. 추진 방식 및 사업

### 1) 추진 방식

- 전통적 ‘정부 대 정부’ 외교와 달리 공공외교의 수행에 있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각종 단체 및 개인의 참여가 필요(ex. 한류 스타)
- 외교부에서 표방하는 “국민과 함께 하는 공공외교”는 이러한 광범위한 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민들의 강화된 국제적 역량을 활용하는 동시에 공공외교에 대한 국내적 이해와 지지 기반도 강화하는 긍정적 선택

### 2) 추진 사업

-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사업<sup>1)</sup>
  - 국민이 직접 공공외교 프로젝트의 기획·시행자로 참여하는 “국민 모두가 공공외교관”
  - 국내외 청년의 자발적·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청년 공공외교단’
  - 시니어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활용한 ‘시니어 공공외교단’
  - 젊은 문화예술 인재를 문화적 불모지인 개도국에 문화봉사단으로 파견하여 현지의 문화꿈나무를 발굴하는 ‘개도국 문화꿈나무’
  - 국내 대학생을 재외공관에 파견하여 각 공관이 시행하는 현지 공공외교 사업을 측면 지원토록 함으로써 공공외교 실무 참여 기회 제공
- 재외공관 사업<sup>2)</sup>
  - 세미나, 포럼, 전시, 공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지 맞춤형으로 한국의 총체적인 매력을 소개하는 매력한국 알리기 사업
  - ‘Quiz on Korea’, ‘K-food World Festival’, ‘K-pop World Festival’, ‘동영상 콘테스트’ 등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지식·기능 경연의 장(場)인 ‘코리아 콘테스트’ 사업
  - 수도 이외 지방도시를 순회하며 한국을 알리는 ‘지방 순회 카라반’
  - 현지 주요 대학, 도서관, 문화센터 등에 한국의 선진 IT기술이 가미된 복합 한국 홍보관 ‘Korea Corner’ 개설 사업

2016년 2월  
『공공외교법』의  
제정으로 체계적인  
공공외교 전략의  
수립과 정책의 추진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전망 ...

**공공외교란**

**'자국에 유리하도록**

**외국의 공중(public)**

**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정부 및 비정부**

**행위자의 의도적**

**노력'으로 정의 가능**

- 현지인으로 구성된 한국문화 동호회, 태권도 동호회, 한국 유학·근무 경험자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을 홍보토록 하는 'K-Lover(친한외국인)' 기반 구축 사업
- 유명 외국인을 한국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하는 공공외교 친선대사 사업
- 외국의 초·중·고 교과서에 한국의 발전상 서술 확대 사업
- 이러한 각종 사업이 실제로 명실상부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는 검증이 필요하겠으나, 공공외교의 수행에서 국민의 참여를 높이고, 재외공관에 예산과 권한을 맡겨 공공외교가 현지 맞춤형으로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임
- 반면, 매력한국 알리기 사업, 코리아 콘테스트 사업, 지방 순회 카라반, 복합 한국홍보관 Korea Corner 개설 사업 등은 사실상 전통적인 문화 외교로도 볼 수 있는 사업들임

**나. 추진 목표**

-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란, '자국에 유리하도록 외국의 공중(public)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정부 및 비정부 행위자의 의도적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 '자국에 유리하게,' 즉 자국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공공외교는 전통적인 외교와 다를 바 없음
  - 다만 그러한 노력의 대상이 외국의 '정부'가 아니라 외국의 '국민'이라는 점에서 정무외교와 차별성이 있으며, 대부분의 인식의 변화가 문화, 지식, 규범 등 상징적 요소의 사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공외교를 소프트파워외교로 간주하기도 함
  - \* 하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 변화의 경우, 경제력이나 성공적인 기업이나 상품(ex. 삼성 스마트폰) 등 물질적 요소 즉, 하드파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현실
- "세계가 신뢰하는 매력한국 건설"이라는 구호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는 '자국에 유리한 외국 국민의 인식'을 "신뢰"나 "매력"으로 동일시하고 있음
- 한편, 반드시 신뢰나 매력이, 또는 신뢰나 매력만이 우리에게 유리한 상대국 국민의 인식인지는 분명하지 않음
  - 예컨대 반한 분위기가 증가하고 있는 일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매력'을 강조하는 대일 공공외교를 펼치는 것보다는 일본인들의 마음속에 '차별의 부당성'을 심어주는 공공외교가 더 유용할 것임

- 참고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을 학살한 독일은 전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궁극적으로 독일 통일에 대한 지지를 국제적으로 얻어내기 위해 공공외교 차원에서 독일의 매력이나 문화를 내세우기보다는 ‘반성하고 성찰하는 독일’이라는 이미지를 심는 데 주력
- 독일의 사례를 볼 때 상대방 국가의 국민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선입견,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자산 등을 고려하여 우리가 상대국 국민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인식이 결정되어야 함
  - 만약 공공외교가 국민의 보호나 통일 준비와 무관하며, 국가이미지 개선만이 공공외교의 목표라고 한다면, 공공외교의 수행은 외교부보다는 오히려 문화관광체육부에 비교우위와 정당성이 있을 수도 있음

### 3. 도전요인과 과제

-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 범위가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우리의 이해관계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공공외교의 필요성도 같이 증가하고 있음
  - 공공외교가 중요해지는 이유는 전통적 방식, 즉 각국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간 공식외교나 우리의 국방력 강화 등으로는 가깝게는 일본, 멀리는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과 지위가 보호되고 존중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임
  - 결국, 세계 각처에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국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현지인들의 인식을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공공외교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과 지위가  
세계 도처에서  
보장되기 위해서는  
현지인의 인식에  
작용하는 공공외교의  
역할이 중요*

#### 가. 도전요인

- 국제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우리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공공외교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공공외교를 ‘공급’할 수 있는 우리의 자원과 인프라는 그에 상응하게 증가하고 있지 않음
  - 특히 외교부의 경우, 그간 전체적인 인력이나 예산 규모가 거의 증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공외교에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이나 재원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음. 그러나 이번 『공공외교법』의 제정으로 다소나마 여건이 개선될 전망
- 우리가 가진 ‘공공외교 자산’은 고갈되고 있거나 식상해지는 등 점차 한계에 도달하고 있어서 기존의 공공외교 자산을 대신할 새로운 공공

**그간 공공외교의**

**자산으로 한류나**

**IT기술에 의존해왔으나**

**한류의 지속성이나**

**IT기술의 우위가**

**점차 위협받고 있어 ...**

외교 자산의 개발이 필요

- 그간 우리는 공공외교의 자산으로 한류나 IT기술에 과다하게 의존해 옴. 그러나 최근 한류에 대한 반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다가 한류의 지속성이나 IT기술의 우위도 점차 위협받고 있음

- 새로운 공공외교 자산의 개발은 정부가 계획하거나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과 영역 밖. 궁극적으로 민간의 주도과 창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자 고민

※ 우리의 공공외교 자산<sup>9)</sup>

- 경제성장과 민주화 동시 달성 → 개도국 성장모델, 개발경험 전수, 선·후진국 간의 교량 역할
- 침략의 역사가 없는 평화 애호국, 정(情), 근면한 이미지 → 국가브랜드
- 다양한 콘텐츠와 역동성, 독창성, 보편성, 현대와 전통의 선순환
- 한류에서 촉발하여 현대 및 전통문화를 거쳐 종합적인 한국 알기로 진화

**나. 늘어나는 과제**

**1) 통일 준비**

- 통일에 대한 주변국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획득하고,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 주민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작업이 박근혜 정부 들어 공공외교의 과제로 등장
- 북한 주민은 물론 주변국 국민들도 통일로 인한 세력균형의 변화, 통일 후 발생할지 모르는 정치적 불안과 안보적 우려 때문에 통일을 반대할 수 있음. 따라서 북한 주민 및 각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통일에 따르는 우려를 파악하고 해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 중국에게는 통일이 한미동맹 확대를 통한 중국 봉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미국에게는 통일이 한국의 중국 경사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일본에게는 통일한국이 일본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설득할 필요가 있음
- 지난 수십 년간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현실에 익숙해진 중국, 미국, 일본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며, 특히 통일이 주는 합의나 영향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불확실성이 내재하고 있어서 주변국 국민들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북한 주민과 주변국 국민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통일

공공외교에 있어서 외교부와 관련부처 간 역할의 분담과 협력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역할분담과 협력방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통일 공공외교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존재

- 방법론적으로도 북한 주민에 대해 어떻게 접근을 하고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하는 문제가 존재

## 2) 미·중 갈등

- 미·중 간 세력전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심화로 인해 양측에서 한국에게 편을 가르라는 압력이 증가하고 있음. 만약 어떤 이유에서건 한쪽을 선택해야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후폭풍을 극복하기 위한 공공외교적 대응이 절실할 것임. 반면, 어느 편도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양쪽으로부터의 불신과 실망에 대한 공공외교적 대응이 필요함. 물론, 전통적인 정부 간 외교적 대응도 당연히 필요
- 중국 국민들에게는 ‘한국이 돈은 중국에서 벌지만 미국과 더 친하고 미국을 추종한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한편, 미국 국민에게는 ‘한국은 형식적으로 동맹국일 뿐, 중국으로 이미 경사되었거나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기회주의적 국가’라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음
- 이러한 양자택일적 압력과 한국에 대한 불신의 증가 속에서는 한류나 IT기술을 활용해 한국의 ‘매력’을 강조하는 공공외교는 역부족.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지는 새우’의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외교적 발상과 전략이 필요

## 3) 한·일 갈등

- 한·일 간 과거사 문제, 영토 문제의 심화, 한·중 유대의 강화 등으로 인해서 일본 내에서 반한·혐한 정서가 급증하고 있음. 반한·혐한 정서는 양국 간 정부 공식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지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
-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정적인 인식이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나라와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국가에 잠재적으로 존재
- 따라서 이제는 단순히 국가이미지를 제고하는 공공외교를 넘어서 문제를 예방하고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공공외교의 전략 및 역량 강화가 필요

## 4) 대내적 공공외교와 사이버 공공외교

- 주한 외국인 및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내적 공공외교, 사이버공

**미·중 간 양자택일적 압력과 한국에 대한 불신의 증가 속에서 한류나 IT기술을 활용해 한국의 ‘매력’을 강조하는 공공외교만으로는 역부족 ...**

**공공외교 초기에는  
국가이미지 개선에  
주력하였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이익의  
증진으로 목표를  
구체화하여야 ...**

간에서의 공공외교 강화 또한 공공외교의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 2014년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18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 약 200만 명),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매해 1,400만 명을 상회함. 이들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정보나 이미지를 외국으로 전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들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공공외교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
- 엄격히 말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나 해외에 거주하거나 한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은 공공외교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그러나 효과적인 공공외교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고,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해외 체류 또는 외국 방문 중인 우리 국민을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을 상대로 공공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지지 기반을 넓히는 노력도 필요
- 국경을 초월하는 사이버공간의 출현과 IT기술의 발달은 공공외교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이자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 전 세계적인 한류의 보급(ex.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사이버공간과 IT기술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현상이지만, 이를 통해 반한정서나 혐한운동이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는 리스크도 동시에 발생
  - 어떠한 조직과 전략을 통해 사이버공간과 IT기술이 주는 공공외교적인 기회는 최대한으로 살리는 반면, 공공외교적 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하는지는 향후 풀어나가야 할 숙제

## 4. 제안사항

### 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차례

- 공공외교 초기 단계에서는 ‘매력’ 등 국가이미지 개선에 주력하였지만, 공공외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이익(interest)의 증진이지 국가이미지 개선 그 자체는 아님. 따라서 공공외교의 포커스를 상대적으로 단순한 이미지 개선에서 실질적인 이익 증진(ex. 자국민 보호)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은 ‘우리의 국익이 무엇이나’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분석을 바탕으로 공공외교 전략이 수립되기보다는 정권 출범 시마다 신정부가 주장하는 국가상(‘중추국가’, ‘가교국가’, ‘신뢰국가’ 등)으로부터 연역 또

는 역산하여 공공외교 전략이 수립되는 경향이 존재해 옴

- 따라서 공공외교는 국가이익의 추구보다는 정권 출범 때마다 새로 제시되는 국가상(image)을 홍보하는 사업이 중심이 되고, 5년 후에는 대개의 사업이 폐기되는 비생산적인 주기를 반복

※ 『공공외교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아직 국가이미지 및 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태

- 『공공외교법』에서 공공외교는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으로 규정(제2조)

**나. 적극적 정책 조합(policy mix)을 통해 시너지를 살려야**

- 공공외교도 국익 증진의 수단이라고 한다면, 공공외교는 정무외교나 경제외교 등 기존의 외교와 독립되어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외교와 최대한의 시너지를 살리면서 수행되어야 함
  - 공공외교는 정무외교나 경제외교를 지원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정무외교와 경제외교가 공공외교를 지원할 수도 있음
  - 특히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일 준비’ 등 여러 정책구상을 임기 내에 실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정책 조합에 넣어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공공외교법』에서는 공공외교와 여타 외교 간의 시너지 증진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나, 2016년 1월 외교부령에 의해 ‘정책공공외교 담당관직’이 신설된 것은 공공외교와 여타 외교 간의 정책적 시너지를 염두에 둔 조치라고 보임

*공공외교를 정무외교나 경제외교와 독립되어 수행하지 말고 기존의 외교와 시너지를 살리도록 수행하여야 ...*

**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용자 중심으로 시각 전환이 필요**

- “공공외교의 출발점은 결국 수용자, 즉 외교의 해외 소비자들”로서, 공공외교란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국 국민의 의식에 작용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인식을 그들이 갖도록 하는 활동
- 상대국의 국민은 역사, 문화, 종교, 인종 등에서 다양하고 이질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반

**공공외교의 대상이****갖는 다양성과****이질성을 정확히****파악하고, 이를****공공외교 전략 및****정책의 수립과 추진에****반영하여야 ...**

응하지 않음

- 따라서 공공외교의 대상이 갖는 다양성과 이질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공공외교 전략 및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반영하여야 함. 즉, 표적 청중(target audience)에 맞는 ‘맞춤형 공공외교’를 수행하여야 할 것임

- 그간 국내에서 이루어진 많은 논의들이 상대국 국민의 특성에 대한 이해나 연구보다는 국내 공공외교 분야 행위자 간 역할의 분담이나 권한의 규정 등 공공외교의 공급체계를 둘러싼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왔음. 이는 기업으로 비유하자면, 상품의 마케팅을 위해서 정작 제일 중요한 소비자의 특성을 파악하지 않고, 기업 내에서 부서들이 역할과 권한을 놓고 상호 열띤 경쟁과 협력을 벌이는 것에 해당
- 『공공외교법』 제정의 의의 중 하나는 그간 국내 행위자 간에 벌어졌던 공급체계의 수립과 주도권에 대한 논의와 경쟁이 일단락된 것임
- 2016년 1월 외교부령에 의해 ‘지역공공외교담당관직’도 신설된 바, 이는 우리의 공공외교가 수용자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라. 장기 지속성 공공외교와 단기현안 대처형 공공외교의 동시 필요성**

- 우리의 전통과 문화 등 우리가 가진 가치나 속성을 전 세계에 소개하고 인정을 받는 공공외교를 정권을 초월하여 장기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현안 문제의 관리와 해결, 나아가 그 예방을 위한 문제해결형 공공외교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한국이 안보를 무임승차하고 중국에 경사되어 있다’는 인식이 최근 미국인들 사이에서 확산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인식을 바로 잡고, 사전에 예방하는 공공외교 전략과 역량이 필요
- 장기 지속성 공공외교와 단기현안 대처형 공공외교는 각각 시간 구조(time frame)와 목적이 다른 만큼 동일한 주체가 수행하는 것보다는 전자는 공공외교 전담부서가, 후자는 해당 현안과 관련된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논리적임. 한편, 양 부서 간의 협력과 조정도 제도화되어야 함

**마. 정책을 넘어 마음가짐으로**

- 모든 정책이나 행위는 공공외교적 함의를 가지고 있음. 예컨대, 한·일 간의 정상회담은 일본 내 반한정서를 순화시킬 수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진승 기념행사 참석은 미국과 일본 내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킬 수 있음

- 모든 외교관이 공공외교적 마인드셋을 갖는 것이 필요하며, 각 부서 내에 공공외교 담당자를 두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함

**바. 외교의 목표와 행동의 중요성**

- 공공외교가 외국 국민의 가슴과 마음을 얻는 것(to win the hearts and minds)이라고 한다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외교가 아니라 궁극적인 외교 목표와 실제 행동
  - 부시 대통령 집권기에 전 세계에 걸쳐 반미주의가 극에 달했던 이유는 미국의 공공외교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부시 행정부의 외교적 목표와 행동이 잘못되었기 때문
  - 외교적 목표는 궁극적으로 보편적 가치에 부합해야 하며, 공공외교도 그러한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공공외교가  
외국 국민의  
'가슴과 마음을 얻는  
것' 이라고 한다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궁극적인 외교 목표와  
실제 행동*

**주석**

- 1) 외교부 공공외교 홈페이지(<http://www.publicdiplomacy.go.kr/>).
- 2) 외교부 공공외교 홈페이지(<http://www.publicdiplomacy.go.kr/>).
- 3) 외교부 공공외교 홈페이지(<http://www.publicdiplomacy.go.kr/>)

**❖ 저자 약력**

**■ 한인택**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同 대학원 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UC, Berkeley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UC, Davis, University of Washington,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강의하였음. 현재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음. 국제정치경제, 핵 전략, 공공외교가 주요 관심분야이며, 최근 연구로 “한국형 공공외교 모델의 모색: 정책네트워크를 활용한 맞춤형, 과학적 공공외교”와 “핵폐기 사례연구: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의 함의와 한계”가 있음.

기획 및 감수: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고정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강현희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3546)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52

E-mail: [policyforum@jpi.or.kr](mailto: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